

與·2野, '전효숙 처리' 한나라 압박

민주당 국회 표결 참여로 선화

"한 임명안 반대해도 처리 가능" 관측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헌법학자 35명이 선언문을 통해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데 이어 26일에는 여성계 인사 20명이 비슷한 요구를 하고 나서는 등 현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를 국회가 신속히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사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절차 논란은 없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었으나, 막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자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상정조차 않고 있다"며 "헌법수호의 칼을 쓰고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는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그동안 중도적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도 이날 한화갑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한나라당을 배제할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히며 한나라당에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청와대에서 보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합법적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당론"이라며 "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국회에서의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국회 표결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언제라도 국회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건이 법사위에서 는

의결 수 있는 여건은 한층 성숙된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더라도 국회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인사청문안의 안전 상 정조차 거부하고 있고 내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돼 1주일 가량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안 처리는 10월 중순 이후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또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최장 30일 동안은 분회의각관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규정 때문에 당장 단독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여당의 고민거리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7일 광주 KT정보센터에서 (사)서남해안포럼 주최로 열린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 간담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가 축사를 통해 지역개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포럼측은 서남해안 개발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과 함께 '범 시·도민 대책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내달 2일 서울서 F1 유치 발표·조인식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10 F1(포뮬러 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발표 및 조인식이 오는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병곤 문화관광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F1대회 주관기관인 'FOM'의 버니 에스테스톤 회장 등이 참석한다.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F1대회는 8기통이하 3천CC의 경주용

자동차가 달리는 레이스로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한다. 전남도는 이날 2010년 대회 유치조인을 마치고 J프로젝트 사업지구인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F1경주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F1 대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코리아 오토밸리 오퍼레이션 주식회사'(KAVO)가 지난 13일 자본금 75억원으로 설립됐으며, 2007년말까지 자기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신중식의원 '밝은 정치인상'

민주당 부대표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 종합상을 수상한다.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은 27일 올해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전국 38개교 대학생들, 국회의원, 행정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정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신중식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종합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재·보선 공천 후유증

탈락자들 탈당 무소속 연대 추진

공천현금 맞물려 판도 변화예고

10·25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 탈락자들이 당의 공천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는 등 후유증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채일병(59) 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화순군수 후보인 정완기(64) 전 전남도의원, 신안군수 후보인 최영수(46) 전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 등 3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민주당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일부 후보들은 이같은 공천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강성만·고관솔·김관선·김일중·김청수·최창원씨 등 신안군수 공천신청자 6명은 27일 오후 4시 신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군수의 아들들을 공천한 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천은 당원이나 국민에 의한 자유경선이나 객관적인 여론조사 경선이 아닌 밀실·세습·지명공천이 이뤄져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이번 재선거에서 무소속 단일화를 이뤄 군민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화순군수 보궐선거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전완준 후보도 이날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무소속 연대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해 이날 10·25 보궐선거 출마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남·진도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일부 인사들도 "선거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을 공천한 것은 어려울수록라도 당을 지켜온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같은 탈락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연대 움직임은 최근 민주당의 공천현금 파문과 맞물리면서 선거판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을 경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무소속의 3자 대결구도 속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화순=조성수기자 css@

"민주당과 합당은 국민에 배척 받을 것"

來光 우리당 신기남 고문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고문(사진)은 27일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과 합당에 대해 "이 단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 고문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합당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열린우리당 창당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배척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당과 합당, 신당은 원칙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우선 우리당을 짝바로 세운 뒤에 민주개혁세력연대는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해쳐모여식' 정계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고문은 특히 '우리당 정체성 확보와 대선후보 조기선출론 등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미 대세고 (현재 거론되는 일부 대선 후보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경선과정에서 당원들로부터 정체성을 검증 받도록 해야한다"며 "정체성 있는 우리당 대통령 후보를 내년 3월, 늦어도 4월까지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 "기간당원들이 일정 정도 지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당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한편 "고건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정체성과 맞느냐"는 질문에 "지금 판단하고 싶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인데..."라고 여운을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역사비평, 전현직 대통령 3인 '동아시아 외교구상' 분석

이승만-강경과 타협 왕래 '세일즈맨' 박정희-동맹과 독자노선 고민 '햄릿' 노무현-이상은 높지만... '돈키호테'

계간 '역사비평' 가을호는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이라는 특집에서 전·현직 대통령 3인의 동아시아 외교구상을 분석해 눈길을 끈다.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은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구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일 인식의 논리구조와 그가 구상했던 동아시아 반공연대 기구를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일인식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강경한 반일 일변도가 아니라 매우 현실주의적이어서 강경과 타협을 왕

래했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평가다.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공동사회 구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아시아 태평양 공동사회'라는 집단 안보체제 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인식을 해부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견으로 조성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정책일 뿐이었다. 그는 "결

과적으로 볼 때 박정희는 미일동맹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동아시아관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노무현의 동북아 구상 연구'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구상을 분석한다.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 예외주의와 한국의 지정학 분단조건, 그리고 국력상장에 대한 분석에 바탕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선순환적으로 달성하려는 비전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의 실현방법이 "자유국방, 한미동맹, 동북아 다자주의로 요약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책구상 실현수단의 부재, 동북아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대한 전망의 부재와 같은 요소는 맹점"이라고 비판한다. /연합뉴스

마사이족 워킹슈즈

- 무릎관절, 요통, 허반
- 관절, 아토피성
-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
- 국내특허 획득
- 로열티 없는 저렴한 가격
- 탁월한 효능과 내구성

스포츠화 187,000원
레저업해(신사화) 197,000원

광주대리점: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 1-11-11 (010) 333-3333

35년 전통의 복교당 인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독송 오가미 식용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장생식품 TEL: 062-385-1303, 382-6900, 382-4334

식물내장우원

인테리어

● 시공, 주택 리모델링
● 단상, 사무실, 카페, 바
● 이음, 가벽, 인테리어 제품
● 실내인테리어, 분수, 플랜지, 방바닥 등

특강: 조경 TEL: 010-511-8280

WWW.SELL.LOVS 1004-1033

더 좋은 상품, 더 저렴한 가격, 맛고을 명품!!

~가성비왕은 끝까지/전날의 미끼입니다.